

현대차그룹, 아들·사돈 회사에 통행세 챙겨줘

현대글로벌비스-삼표 하는 일 없이 부당이득... “부당거래로 노동자 피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 등이 1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벌비스, 삼표가 벌이는 편법 일감 몰아주기를 폭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제철은 원재료인 석회석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벌비스와 삼표를 끼워 넣어 통행세처럼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삼표는 정몽구 회장의 사돈기업이다.

현대제철은 2016년 하반기부터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벌비스와 물류업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현대글로벌비스는 삼표에게 운송업무 재하도급을 줬다. 삼표는

재하도급 받은 석회석 운반업무를 기존 물류회사와 다시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과 광업회사가 직접 하던 업무에 현대글로벌비스와 삼표가 끼어들어 아무 역할 없이 중간에 통행세만 챙겼다. 노조와 법률, 시민단체들은 이런 날로 먹기 행태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 니목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3세 승계를 위해 현대글로벌비스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돈기업인 삼표에게 총수의 사익편취 방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부품 공급 물류를 맡고 있지만, 중간에서

역할 없이 통행세만 떼고 실질 업무는 동진오토텍 등 협력업체에 내려 보내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가 협력업체에 가야 할 수익을 속여 빼앗아 실질 운송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는 불법, 탈법, 합법 가리지 않고 정몽구 정의선 총수 일가의 이익추구에 매달리는 현대차그룹에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바치고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률, 시민사회단체들과 재벌의 지배구조 왜곡, 총수 전횡,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모아 공정위 신고, 고소고발, 주주대표소송 등 재벌개혁을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주 52시간 노동, 이미 법 규정. 노동법 개악 멈춰라”

28일,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연기 등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민주노총은 11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간사들은 11월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합의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안이 ▲중소사업장 노동시간 2021년까지 연장 ▲휴일 노동 중복수당 폐지로 사용자 연장근로 강제 ▲산재 양산, 사고 유발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등을 골자로 만든 노동법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규탄하고,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노동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해석만 폐기하면 된다”라며 “국회가 계속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쓸 힘이라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등 노동악법을 폐기고, 노동개혁 입법에 나서라”라고 꾸짖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과 청년 노동자로부터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질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으로 모아내자”라고 호소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3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의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 상경투쟁 벌이고 있는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등 제도권에 기대하지 말고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관철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네 개 후보 조별로 한 명씩 나와 공동결의문을 읽으며 마무리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정미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28일 오후에 속개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